

요약

- 정책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탈(VC)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산업정책과 기술혁신 등 공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투자기금으로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기술주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음
- 한국의 정책펀드는 2005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시작으로 정부가 출자하되 민간 벤처캐피탈운용사가 투자 결정을 하는 간접투자(모태펀드) 방식을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보였으나, 관련 예산의 축소, 중간 성장단계에서의 지원과 회수 미흡, 연기금 및 보험회사의 참여 저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또한, 녹색금융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및 뉴딜펀드(문재인 정부) 등 대규모 정책펀드는 사업성과 시장성보다는 정치적 구호 중심으로 추진되어 투자 효율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종합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여 정권 교체 시 추진 동력을 잃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간접지원(모태펀드)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경제 외부성을 감안하여 운용에 있어 정부의 관여를 강화하고 법률에 의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부가 일정 손실을 우선 부담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해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도 요구되며, 민간 벤처캐피탈(VC)의 빠른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하여 기업이 정신이 살아있는 혁신적 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1. 정책펀드와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의 육성

- 정책펀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산업정책 또는 기술혁신의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적 목적의 투자기금을 말함
 - 정책펀드는 일반적으로 정부벤처캐피탈(Government Venture Capital; GVC)펀드를 일컫는데,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의의 정부펀드뿐 아니라 민간펀드로서 세제 등 정부지원을 받는 광의의 공공펀드까지 포괄함
- 정책펀드는 벤처캐피탈(VC)이 갖는 시장실패 및 한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부각되었음¹⁾
 - 혁신적 창업기업이 고위험·고수익 구조여서 전통적 금융기관 대출로는 자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은 이들 창업기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창업 생태계의 전문적 금융 중개자로 자리매김함
 - 그러나 민간 벤처캐피탈은 기관투자자가 두텁게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경우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수도권 등에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투자되고, 딥테크 등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소극적이며, 첨단 기술의 확산 등 경제 외부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가 있음
 - 민간 벤처캐피탈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정책펀드를 조성함으로써 혁신 생태계의 지역 균형발전, 장기투자 시각의 제고, 경제 외부성이 큰 첨단 기술의 우선 투자, 여성·청년·지역 기반 창업자에 대한 포용적 성장 지원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최근에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 기술주권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정책펀드가 부각되고,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설립의 움직임 또한 본격화함
 - 중국은 세계 2위 규모의 벤처시장을 갖고 있는데 이중 정부벤처캐피탈이 36%에 달하며 정부 산업정책의 효과적 집행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등²⁾ 정책펀드의 성과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수익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에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출자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³⁾
 - 특히,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재정과 국유기업, 국책은행 등의 공동 출자를 통해 정부벤처캐피탈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10년간 9,12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AI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⁴⁾
 - EU는 기술자립과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Chips Act」(2023)를 제정하여 EU의 정책펀드인 InvestEU 내에 'Chips Fund'를 조성하고,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에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지분투자를 확대함⁵⁾
 - 정부 자금지원에 의한 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국부펀드를 설립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음(아직 구체적 방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임)
 - 영국은 2025년 7월 국가 산업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국부펀드를 공식 출범하여 민간과 공동투자를 본격화함⁶⁾

1) OECD(2025), "Understanding Government Venture Capital: A Primer and a Taxonomy"

2) Ge, G., J. Xue and Q. Zhang(2024), "Industrial policy and governmental venture capital: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3) D. Adler(2022) "Guiding Finance: China's Strategy for Funding Advanced Manufacturing", *American Affairs*

4) Beraja, M., W. Peng, D. Y. Yang and N. Yuchtman(2024),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s in AI", N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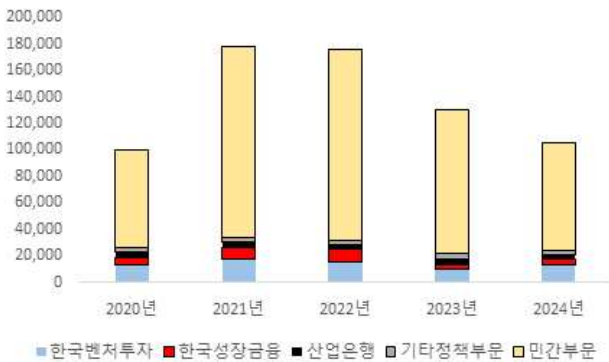
5) M. Ceccarelli(2024), "Chips Fund", EFES 2024

2. 한국의 정책펀드 현황

- 우리나라는 2005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KVIC)를 설립한 이래 정부재정으로 민간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여 왔음⁶⁾
 - 그간의 정책펀드는 정부의 직접 투자 형태(Direct public fund) 보다는 주로 재간접펀드(Fund of fund, 모태펀드) 및 민관합동펀드(Hybrid private public fund)를 통하여 민간 투자시장을 활용하는 간접지원방식을 따라왔음
 - 정부부처의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태펀드 투자는 주로 한국벤처투자(KVIC)를 통해 이뤄지며, 산업은행 등 은행과 공공기관 등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는 주로 한국성장금융을 통해 운용함
 - 우리나라의 정책펀드는 대부분 창업초기 및 그 이전단계에 속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표로 하는 벤처형 펀드이지만, 특정 정책의 수행 또는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한 비벤처형 펀드도 존재함
- 한국의 정책펀드는 벤처캐피탈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축소(2022년 5,200억 원 → 2023년 3,135억 원)되며 국내 벤처투자 규모도 2023년 이후 위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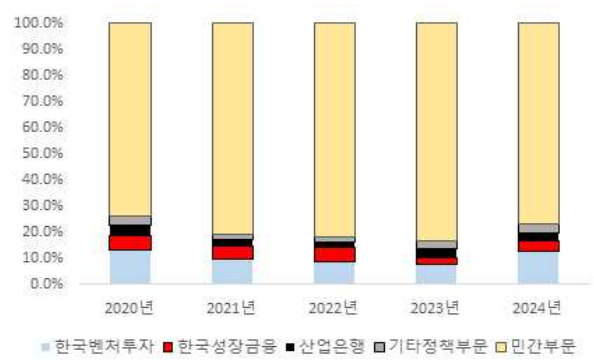
〈그림 1〉 출자자별 국내 벤처투자 금액 추이

(단위: 억 원)



〈그림 2〉 출자자별 국내 벤처투자 구성비 추이

(단위: %)



주: 정책부문은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및 기타정책부문으로 구성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 2. 23.), "2024년 벤처투자 11.9조 원 펀드결성 10.6조 원"

- 한편, 정부는 그간 각 정권의 핵심 아젠다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특정 목적의 대규모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함
 - 녹색금융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뉴딜펀드(문재인 정부) 등이 각 정부에서 추진되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취지가 퇴색되거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 이들 특정 목적 정책펀드도 기존 정책펀드와 마찬가지로 모태펀드(재간접펀드)의 구조를 따랐는데, 뉴딜펀드의 경우 한국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KVIC)가 모펀드 운용을 맡음
 - 뉴딜펀드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부여 등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으로 평가되나,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혁신성장펀드'로 개명하고 예산도 감축(6,000억 원 → 3,000억 원)되며 동력이 크게 약화됨

6) <https://www.nationalwealthfund.org.uk/>를 참조함

7) 남재우(2022), 『국내 정책펀드 현황 및 제도개선』,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3. 그간 정책펀드가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

○ 사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미흡함

-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 규제 샌드박스, 전문인력의 확보, 기술 표준화 등 수요·인력·제도 측면의 생태계 패키지가 함께 지원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음
- 자금지원 정책에만 집중하여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정신을 가진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 “기업가 정신이 살아 움직일 때 부는 축적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저축이 많아도 부는 소멸한다”(케인즈)⁸⁾
- 특히, 정권 교체로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책펀드의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정책펀드가 창업초기 투자에 집중되어 중간 성장단계에서의 스케일업 자금이 부족하고 엑시트 가능성이 낮음⁹⁾

- 2020년 이후 중간 성장단계 이후의 지원을 정책적으로 늘려왔으나, 아직도 높은 창업초기 투자 비중과 국내 IPO 시장의 경직성, M&A 시장의 비활성화로 투자자의 엑시트 가능성이 낮아 투자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 장기자금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함

-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 인내자본에 의한 자금지원이 바람직하나,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과 보험회사들은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성의 불확실성이 큰 전략산업 투자에는 참여를 기피함
- 미국 CalPERS는 전체 자산 중 약 5%를 비상장 벤처 및 PE 시장에 할당하는 데 비하여, 한국의 공적 연기금은 약 1,000조 원의 자산 중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¹⁰⁾

○ 대규모 정책펀드의 경우 정권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오히려 중장기적 성과를 담보하지 못함

- 뉴딜펀드나 녹색성장펀드는 국정 슬로건에 맞추어 추진되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책 키워드 자체가 변경되고 투자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서 운용 주체가 투자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유인을 상실하고 펀드의 중장기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게 됨
- 통일펀드의 경우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정치·외교 환경변화에 크게 흔들리며 남북경협주 위주 펀드 대부분이 청산됨

○ 대규모 정책펀드의 경우 모태펀드의 장점(민간의 투자결정과 정부의 자금지원 결합)을 효과적으로 도출하지 못함

- 정부는 투자책임과 상관없이 정치적 구호와 정책적 타당성을 강조하였고, 운용사는 정책 순응적 태도로 사업성과 시장성 평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투자를 결정한 측면이 있어 펀드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음

8) Keynes, J. M.(1930). "A Treatise on Money", Chapter 29

9) KIET(2023),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술금융 혁신 방안 연구』

10) 전자신문(2025. 6. 30.), “연기금이 벤처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4. 정책펀드 성격의 변화 필요성

- 그간의 정책펀드는 벤처캐피털(VC)시장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로 운용되어 벤처를 활성화하고 투자 성과를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상장 이전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시장은 심각한 정보 비대칭과 외부성에 따른 시장실패로 인하여 정부 정책펀드에 의한 지원이 필요함
 -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배분은 벤처캐피털운용사가 투자를 결정하는 재간접 구조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¹¹⁾ 정부는 그간 정책펀드를 직접 운용하기보다는 민간이 투자를 결정하는 모태펀드 방식을 활용함
 - 정책펀드는 단순한 자금공급자의 역할을 넘어, 펀드운용 전 과정에 모태펀드가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으로 인하여 벤처캐피털운용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켜 자펀드의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¹²⁾
- 그러나 장기 인내자본이 필요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모태펀드로 운용할 경우 단기수익 성과를 중시하는 벤처캐피털운용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대리인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
 -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주요 전략산업은 장기의 인내자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창업초기와 성숙단계 및 확대 투자에도 자금지원이 요구되므로 창업초기 벤처캐피털시장에 정형화된 현재의 모태펀드 운용방식은 한계가 있음
 - 또한 이들의 주요 전략산업은 기초과학·첨단공학 기반의 딥테크 산업이어서 경제 외부효과 및 산업연관효과, 그리고 경제안보 영향을 감안할 때 시장원리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음
- 정부의 산업정책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운용사의 성과 측정을 정책목표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하여 인센티브를 정부와 일치시키는 노력이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펀드 운용에 관여 및 통제를 강화하거나 더 나아가 직접 정책펀드의 투자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의 정책펀드 운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시장 주도’ - ‘인센티브 제공’ - ‘이해관계자 참여’ - ‘법적 제약’ - ‘법적 위임’ 순으로 강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법적 위임’은 정부가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 공공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정부가 임명한 이사회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임¹³⁾
 - 정부가 정책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은 관료적 비효율성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BPI France(프랑스), KfW(독일), 산업은행(한국) 등이 정책펀드를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연계분야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국유기업을 통해 운용하고 있음
- 한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는 단기간 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불확실성 및 외부경제 효과도 크므로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본의 참여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남재우(2022); Brander, J., Du, Q., Hellmann, T.(2015), "The effects of Government-sponsored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 evidence", *Review of Finance* 등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재간접펀드가 정부 직접운용보다 양호한 성과를 보인다고 지적함

12) 강원(2019), 「국내 모태펀드의 성과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 OECD(2025)

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의 성공적인 운용방안

- 주요 전략산업의 육성은 시장 주도의 정책펀드 운용에 의해서는 한계가 크므로 민간 벤처캐피털운용사를 활용하는 모태펀드 방식과 병행하여 정부 주도의 투자방식을 활성화함
 - 벤처캐피털시장에서의 혁신기업의 지원은 기존의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개선하며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정책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털시장을 구축(Crowding out)하는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필수적인 분야에 한해 시장원리에 의하여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따름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지적됨¹⁴⁾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정책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는 모태펀드의 제도설계가 요구되며, 집중 투자가 필요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주도하여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할 경우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의지가 부각되며 관련 규제제도의 정비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 등이 뒷받침될 것을 예상하여 민간투자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정부 주도의 정책펀드 운용을 위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적인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정권이 바뀌어도 투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제도를 강구함
 - 지속성 확보를 위해 초당파적 합의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투자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정책펀드의 목표, 투자기간, 중장기 KPI(기술수준, 고용, 공급망 안정성 등)를 명문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함으로써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¹⁵⁾
 - 다만, 전략산업 선정은 정부의 산업정책 판단에 근거하므로 전략수립 등에 있어서 정부 관여 또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는 상업적 투자회사로서 운영상 독립이 보장되고 정부의 일상 투자결정 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영국의 국부펀드는 국가산업전략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설치되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제도”의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을 지원함
 -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을 통하여 자금지원뿐 아니라 연구지원, 공공조달, 규제 샌드박스, 전문인력의 확보, 기술 표준화 등 수요·인력·제도 측면의 종합적인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EU의 「Chips Act」(2023)는 자금지원뿐 아니라 R&D 인프라 조성, 인력 양성, 공급망 위기 대응 메커니즘 구축, 공통 표준제정 및 인증 프로토콜 구축 등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담고 있음
 - 정책펀드 투자 대상인 주요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예컨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함
 - 정책펀드 투자 혁신기업 제품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업이 일정비율을 우선 구매하여 초기 매출 확보를 지원함
 - 산업 맞춤형 장기 채용 프로그램(예: 계약학과)을 활성화하여 국가전략 기술인재 유치를 지원함
 - 기술규제 샌드박스를 상시화하여 혁신기업이 규제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기술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아울러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가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의 완전 폐지, 개인파산 시 회복 지원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가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세컨드찬스 제도 및 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14) 남재우(2022)

15) 한상범(2025), 『혁신경제 4.0』, 제7장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부분을 참조함

○ 정부보증 등을 활용하여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로 하여금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함

- 주요국은 정책펀드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용하고 있음¹⁶⁾
 - 정부는 가장 먼저 투자하고 가장 나중에 회수함(영국의 지역벤처캐피털)
 - 정부 출자금을 대출로 전환함(영국의 Enterprise Capital Funds)
 - 정부 투자자의 수익 상한을 설정하고 초과수익은 민간투자자에 귀속함(호주의 Pre-seed Fund)
 - 민간투자자에 매입옵션을 부여함(이스라엘의 Yozma, 뉴질랜드의 New Zealand Venture Investment Fund)
 - 정부가 펀드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장함(독일의 WfB, 덴마크의 Equity Guarantee Program)
- 다만, 전략적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추후 통상문제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장기자금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전략적 산업 정책펀드에 대하여 연기금 및 보험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초기 투자 손실(예: 10%)에 대하여 정부펀드가 정책적으로 책정된 보증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함
 -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정부펀드의 보증을 활용하여 투자리스크를 경감하고,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정부기관의 부분 보증을 받을 경우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 시 위험기중치를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참고로 최근 EU 및 영국은 연기금 및 보험회사의 역내에 필요 산업에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임
 - 2024년 발표된 '드라기 보고서'는 EU의 연기금 및 보험회사 자산의 '생산적 사용'을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연기금 및 보험회사의 비상장 자산, 인프라,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EU는 InvestEU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손실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 민간 공공자금이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에 유입되도록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보증 대비 14배의 투자 레버리지를 달성하였음¹⁷⁾
 - 영국은 2023년 7월 맨션하우스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DC연금 자산의 5% 이상을 비상장 영국 고성장 기업(VC·PE 등)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2025년 7월 금융개혁안(Leeds Reforms)을 발표하여 DC연금 자산을 생산적 자산에 일정 비율 이상 배분하는 한시적 예비투자권한을 제도화할 방침을 공식화했음¹⁸⁾

○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펀드에 개인 및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효과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

- 개인의 경우 뉴딜펀드에 상당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함(1인당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배당소득세 9% 분리과세)
- 연기금,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을 정책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함

○ 창업초기 이외의 중간 성장단계(스케일업) 자금지원과 엑시트(회수)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

- 세컨더리 펀드 출자비중을 확대하여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등과 연계하여 상장 직전 단계(프리IPO)의 브릿지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캐피털의 빠른 엑시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책펀드 투자 혁신기업 등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의 M&A 규제를 완화하여 피합병 및 매각을 통한 엑시트를 지원함

16) OECD(2025)

17) European Commission(2024), "The RHOMOLO-EIB interim impact evaluation of InvestEU"

18) UK Government(2025), "Financial Servic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y"